

## | 위원회 동정\_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 |

# ‘더 나은 미래, 함께 지는 국민연금’ 논의 박차

송해순 전문위원

국민연금을 개혁하고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18.10.30. 발족한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이하 연금개혁특위)는 최근 논의에서 정부의 '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대해 보고받는 한편, 합의의 방식과 특위 운영일정 및 조사·연구 계획(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대국민 공식발표에 앞서 '18.12.14. 6차 전체회의에서 '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보고했다. 정부(안)은 4가지 방안으로 구성됐다. 1안은 현행 유지다. 2안은 기초연금 강화방안으로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핵심이다. 3안과 4안은 모두 노후소득을 전반적으로 강화한다는 것이 핵심이지만, 3안은 보험료를 '31년까지 12%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5%로 하는 데 비해, 4안의 경우는 보험료를 같은 기간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50%에 맞춘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정부안이 먼저 특위에 공개된 점을 높게 평가하고 정부안을 잘 소화해 특위의 논의결과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영계 역시 노동계 의견에 공감하고, 무엇보다 조급성을 버리고 충분한 토의를 거쳐 내용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18.12.28. 7차 전체회의에서는 합의 방식과 실무협의회 구성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

특위가 합의를 도출한다는 가정 하에 기본원칙 또는 우선과제에 대한 1차 합의를 도출한 후에 최종합의를 가져가야 한다는 의견이 노동계와 청년 등으로부터 제기됐지만 일부 위원들의 이견도 있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운영방식 관련하여서는 전체회의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부분까지 더욱 풍부하게 논의하자는 차원에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19.1.11. 8차 회의에서는 조사·연구가 현 시점에서 대부분 부정적이라는 제1차 실무협의회 의 결론을 존중하여 추진하기 않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19.1.25. 제9차 회의부터 기초연금 수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했다.

노동계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2018년 명목소득대체율 수준 45%로 고정하고, 2019년도부터 0.5%씩 다시 상향하여 2028년부터 50%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험료율은 2020년부터 1%p 인상하고 10년간 0.2%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1안과 2020년부터 20년간 0.2%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2안을 제시했다. 기초연금 급여액은 2021년까지 30만 원(A값\* 12% 수준)으로 인상될 예정이나 이를 A값 15% 수준까지 인상해야 하며, 지급대상은 소득하위 70%에서 8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A값: 국민연금가입자의 3년 평균 소득액

이에 비해 경영계는 국가의 노후소득 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더 강조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은 국민 노후의 최소 보장수준을 담당하고, 추가 노후소득은 사적 연금이 보완하는 방식을 통해 적정 노후소득과 공적연금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특히 기업들은 국민연금과 법정 퇴직금으로 12.83%(국민 4.5%+퇴직 8.33%)를 '근로자 사회안전망 구축 비용'으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에 대해 현행유지안을 제시했다.

한편 청년 단체와 비사업장 가입자들의 의견도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청년유니온은 현 국민연금 제도는 후세대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

다며 현 세대부터 부담을 같이 나누는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동시에 최소한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소득대체율 설정 및 보험료율 부담의 현실적 고려를 함께 판단해야 하므로, 소득대체율은 45%, 보험료율은 단기적으로 5%이내 인상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기초연금은 40만원으로 인상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 기초연금 감액 폐지, 기초연금 급여수준 소득 연동 방식으로 개편, 지급대상 확대 등을 제안했다.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는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의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과 노인빈곤에 대한 예방적 기능을 위해 최소 45% 이상의 소득대체율을 통해 적정급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기초연금은 적정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낮아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에 대한 보완을 위해 30만 원 조기 인상을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는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의 노후소득보장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으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기여금(4.5%)과 부담금(4.5%)을 합하여



산정되므로 소득대체율을 45~50%로 높이되, 납입보험료는 장기적으로 18%로 인상하고 소상공인 부담금은 점진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한은퇴자협회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의 가입유인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선하고 기초연금액을 30만원으로 조속히 인상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삭감은 중단하고 단계적으로 50%이상으로 상향하며, 소득대체율 삭감 중단 및 상향에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율은 1년에 0.2%p씩, 15년간 33%로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현 세대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소득대체율은 45% 유지 및 단계적으로 50%로 상향하되,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매년 1%p씩 인상하여 최대 20%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기초연금은 기여에 따른 수급이 아니라 보편적 복지로서 소득과 연동한 일정 수준의 급여(40만 원)를 모든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40년이 비현실적이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평

균 25년을 넘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연금 실질 소득대체율이 30~35%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2028년까지 40%로 인하 예정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5%로 유지 또는 50%가 되도록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에 따른 점진적 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하며, 단, 5년마다 단계적 1%p 인상은 인상 시점에서의 충격이 적지 않으므로 매년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방식(소득대체율 45% 시 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50% 시 보험료율 13.5%)으로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또한 기초연금은 현재 국민연금 평균 급여수준과 재원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추가 인상 논의는 이르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 기초연금 수준 등에 대해 위원들의 기본 입장을 확인하는 회의였으며, 제10차 전체회의('19.2.8.)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각자 논의(조정) 가능한 의견을 가지고 계속하여 논의하기로 했다.

발족취지: 국민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은 세대 간계층 간 연대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할 전사회적 과제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여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해답을 찾아가고자 '18.10.30. 발족